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5. 23.(목) / 총 4매(본문 3, 참고 1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• 과장 이경석, 사무관 방대혁(☎044-201-3775, 3778)
	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지원팀	담당자	• 팀장 이지혜, 사무관 조관우(☎02-397-5505, 5518)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!

- 학교, 체육관, 마을회관 등 생활SOC를 아름답고 편리하게-

- ❖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간 「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」 발족
- ❖ 도시재생뉴딜,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, 총괄건축가 위촉, 가격입찰 제한 등 공공건축 사업추진절차 전면 개편 추진

□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위원장 승효상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(이하 ‘범정부협의체’)* 발족식을 24일 14시에 개최하였다.

* (참여부처) 국무조정실, 교육부, 농식품부, 문체부, 복지부, 국토부, 해수부, 행안부, 경찰청, 조달청, 행복청, 새만금청 등

□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, 도서관, 복합커뮤니티센터, 파출소 등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,

○ 그간 공공건축물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.

-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.18일 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’을 상정하여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.

[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(4.18)’ 주요 내용]

①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·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

- 총괄건축가·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 업무를 총괄·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
-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지원 정책 강화로 디자인 개선 역량 보완

②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

- 노후시설 활용 등 포함,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설계업무 절차 혁신
- 소형 공공건축물(설계비 1억 미만)도 디자인 개선 절차 마련

③ 부처 지역개발·생활SOC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

-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·지원체계 마련
 - 5개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*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
- * 도시재생뉴딜(국토부), 학교공간혁신사업(교육부),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사업(문체부), 일반농산어촌개발(농식품부), 어촌뉴딜300(해수부)

□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’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·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

-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일부 절차가 미흡*하였고, 이로 인해 ‘좋은 건축물’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.

*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, 건축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주도,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, 지자체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지역특색 반영 미비 등

- 반면, 미국·일본·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,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.

-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, 이러한 사업별 추진 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.
-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*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 - * 도시재생뉴딜, 학교공간혁신사업,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SOC사업, 일반농산어촌개발, 어촌뉴딜300 등
-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, 담당자 워크숍/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.
-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, 국·공립 어린이집,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‘(가칭) 공공건축특별법’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.
-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“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,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.”면서,
 - “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‘좋은 건축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다.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관우 사무관(☎ 02-397-55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

-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19.4.18)에 상정된 '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'의 후속조치로서 『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』 구성

⇒ 관련 부처와 국건위간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* 부처간 협업 및 부처별 개선방안 이행·관리 지원

* 도시재생뉴딜(국토부), 학교공간혁신사업(교육부),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(문체부), 일반농산어촌개발(농식품부), 어촌뉴딜300(해수부)

□ 구성방안(안)

- (개요)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심의·의결을 담당하는 범정부 협의체와 실무지원을 담당하는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
 - (협의체) 국건위 위원장/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관련 부처별 실장급으로 구성(간사: 국토부 건축정책관(국건위 기획단장 겸직))
 - (실무분과위) 1) 지역개발, 2) 공공건축제도, 3) 신도시관리 실무 분과 별로 부처별 과장급으로 구성

<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추진체계(안)>

